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기회와 기대

정해구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INFO

1999년의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듯하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의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20세기의 역사를 마치고 21세기 새 세기·새 천년 역사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분단의 과제가 미해결로 남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탈냉전 상황이 도래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 비추어,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2년차로 진입하는 올해에는 남북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올해 남북 관계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올해의 남북 관계이기에,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상황 및 남북 관계 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커

다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금창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각국의 대응책,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응책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새로이 재개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남북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금창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

지난 8월 31일 북한은 인공위성 물체를 쏘아 올렸다. 이는 북한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장거리 미사일 운반 능력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래 북한의 영변 부근의 금창리 지하 시설이 북한의 핵 활동을 위한 시설이 아닌지 주목해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창리에서 비밀리에 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compelling), 그러나 결정적(conclusive)이지는 않은'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핵 활동 의혹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의 위기는 다시금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미 북미간에는 1993~94년 사이 심각한 핵 갈등이 전개된 바 있었고, 그 결과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키로 했던 북미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었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불안정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북미제네바합의는 비록 임시적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그런대로 유지시켜주는 어찌면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의 금강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로 북미제네바합의는 다시 한 번 동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탈냉전과 더불어 야기되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변화 속에서 고립무원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북한측 입장에서는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이 자신의 체제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탈냉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코자 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서,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증대시키는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탈냉전 이후 미

대의 정책의 기초가 과거 對사회주의권 봉쇄(containment) 전략에서 적극적인 개입(engagement)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美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미제네바합의 이후 '대북 연착륙(soft landing)'의 온건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타협해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그들 체제 보존의 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 의혹 및 미사일 문제는 '협상용'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고 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로 여지껏 대화중단의 긴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나아가 이에 바탕을 둔 남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일괄타결론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시행 착오를 거듭하며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남북 관계의 현실 속에서,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취해왔던 대북 정책, 즉 '햇볕 정책'(sun-shine policy)이

란 이름의 대북 포용·화해 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잠수정 침투 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 성사되었던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및 종합 개발 계획의 성사는 김대중 정부 초기 대북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 1999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한반도 최대의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금창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 올해초 다음과 같은 일련의 언급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일정 시사해준다. 우선 1월 4일 개최되었던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불안정의 根因이 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바탕 위에서, 금창리 문제 등 제반 현안들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과 남북 당국간 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안보 정책의 3대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증진,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속 추구, 안보 및 대북 정책에 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 관계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월 10일 「도쿄신문」과의 회견에서 일괄 타결 문제에 대해,

“북한에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경제 협력·안전 보장을 부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중지와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그동안 혼선을 면치 못했던 대북 정책의 재정비 수준에 머물렀던 김대중 정부 1년차의 대북 정책이 올해에 들어서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또한 그 연장선 상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일괄타결론’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성공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김대중 정부의 일괄타결론에 대한 미일의 반응, 특히 미국의 반응은 일단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 대화는 재개될 것인가

한편, 금창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 등 북미간의 주요 현안들과 더불어,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남북 대화의 재개 문제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이산 가족 문제 등 남북한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재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미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된 바 있

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도모함으로써, 전면적인 남북 화해의 轉機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남북한 당국간에 가장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북경차관급회담이 시도되었으나 상호주의 문제로 대화 재개에 실패했던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올해의 남북한의 노력은 보다 신중하게 모색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2월 3일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의 이름으로 올 하반기쯤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북한의 제안은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 군사 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남한내 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 활동 자유 보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제안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문제와 이산 가족 문제 등 남북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 역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다. 이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김대중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해 조건없는 대북 비료 지원 및 미전향 장기수의 석방 및 교환 문제까지 검토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남북 대화, 특히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현재 북미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 북한의 금창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또한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간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조성될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척될 경우, 적어도 올 하반기쯤에는 남북간에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예상이다. 또한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올해의 중점적인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일괄 타결의 추진과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노력은 일단 긍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 관계 전망과 기대

사실 탈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0년대 후반 이래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던 기회는 두 번이나 있었다. 그 첫번째 기회는 남북한이 비록 각각의 의식이지만 유엔에 가입하고 남한에 배치되었던 美 전술핵이 철수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1991년 후반기 때였다. 그러나 이 호기는 북

한 핵문제의 등장으로 무산되었다.

그 두번째 기회는 1994년 6월 카터 美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대타협의 단초가 마련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개최 역시 약속되었던 1994년 중반기의 기회였다. 물론 이 타협은 북미간에는 제네바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김일성의 사망 및 이로 인해 남한에서 야기되었던 조문 파동 등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남북 관계는 지금껏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금창리 지하 시설 및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현재 시도하고 있는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은 그 세번째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번째 시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의 두 기회의 상실로 인해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의 해빙은 이미 10여 년이나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 해빙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시도는 어쩌면 더 이상의 시행 착오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올해 상반기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 시설, 미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현안들이 김대중 정부의 계획대로 일괄 타결되고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적어도

올 하반기에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면,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의 전망은 밝다. 그럴 경우 남북은 적어도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者회담 역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사태가 잘 진전될 경우, 우리는 냉전과 분단 속에서 반세기 이상이나 적대와 갈등으로 시종했던 한반도의 뼈아픈 과거 역사를 비로소 청산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새 세기·새 천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이 같은 시도가 다시 한 번 실패했을 경우, 우리는 20세기 후반의 시대 착오적 유산을 이끌고 21세기에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7